

메가특구법 지연... 광주 반도체, 특별법으로 먼저 간다

정부가 광주군공항에 들어설 반도체 팹 조성을 위해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메가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특구법)’ 대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속도를 높인다. 특히 다음달에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산업특위)’를 발족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지 선정과 인신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여의도 정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등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다음달 열리는 경기국회 전까지 초안을 만들어 당정이 1회독을 한 뒤 발의하려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부처 간의 이견으로 표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메가특구법 대신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광주군공항 반도체 팹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과 시행령에는 산업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수도권 밖을 먼저 고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반도체산업특위’를 신속하게 발족하는 일이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은 특별법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할 때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클러스터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먼저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기본조사를 마친 뒤

정부, 내달 클러스터 지정·대통령 직속 특위 발족 추진 전력·용수 에타 면제, 25일 국무회의서 단행 가능성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환경·교통·재해·개발제한구역(GB)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계획 승인과 고시가 나온다. 군사시설 제배지와 보호구역 조정, 부지 인도, 기반시설 설계는 이와 별도로 추진된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 등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이우도 클러스터 지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팹을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평택도 지난 11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자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해 정부로부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산업특위 설치도 시급하다.

특위는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특별조직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의 장, 반도체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명 이내 조직체로 꾸려진다. 특위 간사는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특위 산하에는 특위가 논의하고 위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도체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와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 등이 발족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광주 반도체 팹 조성

과 관련해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이다. 대상 사업은 반도체 국가산단에 들어갈 전력 1단계 공급선로 공사, 동북댐 증고(增高) 확장 공사,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 확충 공사 등이다.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에타 면제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단행될 수 있다. 전력망의 경우 지난달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도중에 전력을 분기해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팹에 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분기 지점부터 산단까지 23km 구간에서 지중화선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이후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구축해 6GW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루 65만t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동북·주암댐에서 하루 35만t의 공급용수를

대는 한편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일 30만t 용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팹 조성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착공이 목표다. 광주특별시는 이를 위해 1억40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조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 반도체 팹 건설의 거푸집이 될 메가특구법이 지연되는 이유는 ‘연구직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논란이 된 내용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이달 초 발의 방침을 뒤로 미뤘고, 여기에 관련 부처 일각에서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내용과 관련해 특별법 추진에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시의회, 동부권 산업현장서 미래 성장전략 모색

미래산업위, 스마트물류 등
동부권 산업 현장 직접 방문
산업·물류 연계 방안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양·순천·여수의 주요 산업현장을 찾아 주력산업의 첨단·친환경 전환과 지역 간 산업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는 24일 동부권 산업현장 방문과 전문가 특강,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는 제1대 미래산업위원회 의원들의 의정 역할을 높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필요한 산업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순천·여수가 보유한 철강과 항만·물류,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 기반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회는 첫날 광양스마트그린산단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기업인 아르고마린토텔R&D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제조혁신과 저탄소 공정혁신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철강을 비롯한 기존 주력산업을 첨단·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스마트물류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점검했다. 이어 순천 동부청사에서 순천대학교 김현덕 교수를 초청해 ‘북극항로 시대, 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는 24일 광양스마트그린산단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기업인 아르고마린토텔R&D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제조혁신과 저탄소 공정혁신 추진 상황을 살폈다.

광주의 미래 성장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한 국제 물류환경과 세계 산업집사의 변화가 전남 광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광양항과 여수광양항권의 물류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해상 물류환경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여수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전환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

취할 예정이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정책 과제도 점검한다. 이귀순 미래산업위원장은 “광양·순천·여수는 철강과 항만·물류, 미래산업, 정유·석유화학 등 전남광주의 중요한 산업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 산업을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은 광주와 전남

의 산업·물류·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기회”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산업위원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수렴한 산업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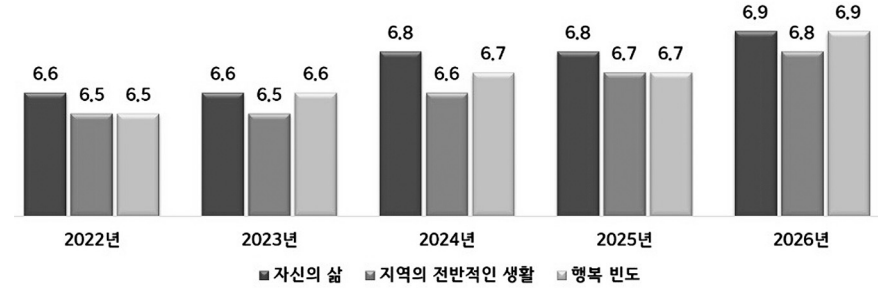
전남 주민 삶 만족도 ↑...결혼·자녀 인식도 개선

2026년 전남도 사회조사 결과 6.9점...초혼 건수 2년 연속 상승

전남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낮아졌으며,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소폭 상승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전남도가 전남지역 1만9116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전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요구를 파악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전남지역 주민의 삶 만족도는 2022년 6.6점에서 2024년 6.8점, 올해 6.9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지역 생활 만족도, 행복 빈도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2024년 보다 높아져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가족 분야에서는 초혼 건수가 2023년 4279건에서 2024년 5246건, 2025년 552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아졌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0.6%로 2024년보다 0.8%p 상승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66.5%로 같은 기간 1.3%p포인트 올랐다.

소득·소비 분야에서는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4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5%에서 2024년 2.5%, 2025년 2.2%로 낮아져 물가 상승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모두 감소했다. 2025년 전남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1000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68.1%로 3.6% 하락했다. 전남지역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25년 의료기관이 전년보다 8곳, 의료인력이 433명 늘었다. 올해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3.5점으로 2024년보다 0.1점 상승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불만족 요인으로는 진료·입원 대기시간이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 의료인력 부족이 13.9%로 뒤를 이어 전문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 결과는 주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의료 서비스 개선 등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주민들의 응답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지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SK하이닉스’서 계속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일원의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평완 안전민생부시장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실무진이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속도전보다 더 빠른 전력전’을 강조한 만큼 전남광주도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준비하겠다”며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여건을 최대한 앞당겨 준비하고,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하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지와 인프라, 기업 지원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춰나갈 계획이다.

안도걸 “통합지원금 ‘기존 예산과 별도 순수 재원’ 보장을”

정부에 사용자·집행 원칙도 재확인
미래대응기금 국회통제 보장도 주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사진)은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통합지원금은 기존 예산과 별도의 순수 재원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통합지원금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당초 취지에 맞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3 원칙은 순수 재원 보장과 함께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성과평가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통합지원 인센티브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성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분야의 적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제2의 일반회계’ 또는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인재 등 지출 분야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기금

운용계획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을 별도로 설치해 지방·교육재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정량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수 재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국회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적극적·전략적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확고

히 하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결산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재정상태는 파행에서 정상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초긴축 재정정책을 고집했고 그 결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와 성장을 회복시키고 세수 기반을 강화해 세수결손의 고리를 끊어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사이클에 순응하는 재정정책 △경제질서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선도적·전략적 투자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확대균형을 성공적 재정정책의 요체로 제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동의하며 이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